

6개 재활용단체 통합,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탄생 최주섭 초대 이사장 취임



최 주 섭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플라스틱, 페트병, 캔, 유리병, 종이팩, 스티로폼 등 기존 6개로 분산돼 있던 재활용단체가 통합돼 지난해 12월 4일 법정 단체로 새롭게 설립된 (사)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이 3월 20일 SC컨벤션 강남센터에서 '2014 회원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인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의 최주섭 초대 이사장에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십시오.

공제조합은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품과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의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하는 일은 크게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분담금 징수 △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 사업 △ 유통지원 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존 6개로 분산됐던 조합을 하나로 통합한 이유와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분산돼 있던 조합을 하나로 통합한 것은 의무 생산자의

중복 가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공제기능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합성수지 등 6개 재활용협회로 나뉘어져 생산자가 제품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통합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장점이 있습니다.

통합조합은 지난해 5월 22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환경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했습니다. 중복 지출되는 행정비용의 낭비가 줄어들고 공익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공적기능 강화와 재활용 자금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용유통지원센터도 설립됐는데 공제조합의 역할과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요?.

유통지원센터는 기존 6개 포장재 조합에서 시행해오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한 공익사업과 회수·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등도 수행합니다.

좀더 쉽게 설명한다면 공제조합은 의무 생산자로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징수하고, 유통센터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분배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기관으로 분리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목표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양 기관 모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고,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고 난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 또는 회수하는 것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 제도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에게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제품의 설계나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있는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시오.

EPR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체코, 헝가리 등 대부분 유럽 국가를 비롯,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예치금제도를 보완해서 2003년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은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EPR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지적해주세요.

2003년 금속캔 타이어 등 생활 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재활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전인 2002년 93억 8000톤에 불과하던 재활용량이 2011년 기준 153억 3000톤으로 늘어나 국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생산이나 기술개발 등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와 달리 선진 외국의 재활용 산업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1기 정기총회

현 정부는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국정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아직도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수거율은 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 폐자원의 수거가 미흡하다는 것은 폐기물의 매립·소각량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원료부족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국민들의 협조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 수거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거된 폐자원을 자원으로 활용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물질이 들어있는 빈병이나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을 하기까지 비용과 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생애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중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원사인 의무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는지 말씀해주시시오.

일부에서는 개정된 법이 의무 생산자들에게 너무 짐을 떠 안기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자원의 절약과 순환이라는 큰 틀에서 제품 포장재의 선택권은 의무 생산자에게 있으므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선택과 신기술 접목은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공제 조합 역시 강화된 의무 생산자의 입장에서 재질 구조개선과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사업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생산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질·구조 개선에 성공한 기업에는 품목별 분담금을 인하해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과 회수 의무를 다한 의무 생산자에 대해서는 그린마크(가칭)를 부여해 업체의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포장재 회수·선별 재활용 기법과 체계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기울이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외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재활용 시장의 외연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제조합 초대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조합을 이끌어 가실지 각오를 밝혀주시시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경복지국가를 선도하는 공익법인을 목표로 조합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공제조합의 수장으로서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유익하고,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 사업자의 고충과 애로점을 충실히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해서 EPR제도가 보다 한 단계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